

2025학년도 5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 문제지

#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 4쪽이 모두 인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맑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모의평가를 모두 푸신 후, 배포한 게시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것은 매년 모의고사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매년 양질의 시험지를 무료로 배포하기 위함이니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해당 모의고사를 위해 힘써주신 출제진 및 검토진의 이름은 다음 쪽 표지에 기재하였습니다.
- 해당 문제지는 저자의 창작물로, 학교, 학원 등에서 학습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용도(판매, 불법 복제 후 도용 등)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치와 법 ..... 1, 2, 3, 4 쪽

※ 감독관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 출제진 및 검토진

## 출제진

윤준수(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재학)

## 검토진

김건우

김근영(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김호진

윤유(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재학)

江濟東圓嶺(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재학)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번호  -  제 ( ) 선택

1. 정치를 바라보는 다음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치를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권력만의 활동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이는 특정한 공간이나 주체에 제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①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 ② 교내 동아리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③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조정 과정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⑤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통한 사회 질서 유지와 갈등 해결 과정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법치주의는 법에 따라 국가 권력의 모든 통치 행위가 행사되어야 한다는 통치 이념으로, A의 등장은 인치(人治)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A는 법의 제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만을 요구함으로써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통치 행위의 발생이 우려되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법의 목적과 내용이 헌법 이념에 부합할 것을 강조하는 B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 ① A는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강조한다.
- ② B는 입법 작용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 ③ B와 달리 A는 제정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법에 따라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A와 달리 B는 국가 권력과 국민을 구속하는 법은 반드시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 ⑤ A와 B는 모두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의 재정을 내실화하는 것은 A에 따른 국가의 책무로 볼 수 있다. 이는 국가가 복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복지재정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항상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한편, A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재정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B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민주적 합의를 통해 A와 B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

- ① A는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중시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② B는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실현된다.
- ③ B와 달리 A는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실현된다.
- ④ A와 달리 B는 국가의 최종적 의사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 ⑤ A와 B는 모두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근거가 된다.

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의회,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중 하나임.)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 A의 권한과 B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 A가 주도하는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B는 예산 승인 및 정책 감독의 권한을 가짐으로써 B는 A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주민들은 지방자치법의 조항에 근거하여 ㉡ 조례의 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A가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A를 ㉢ 해임할 수 있는 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A는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B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 ② B는 A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
- ③ A는 ㉠의 개정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B는 ㉡에 따라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 ⑤ ㉢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직접 민주제 요소이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국은 모든 시기에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부 형태의 변경은 t+1~t+3시기 중 시기 초에 한 번만 이루어졌다. 표는 갑국의 t~t+3시기의 의회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갑국 의회에 정당은 A~D당만 존재한다.

| 구분            |        | t시기 | t+1시기 | t+2시기 | t+3시기 |
|---------------|--------|-----|-------|-------|-------|
| 의회 제1당        | 정당     | A당  | B당    | C당    | ㉠     |
|               | 의석수(석) | 120 | 120   | 110   | ㉡     |
|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 |        | B당  | B당    | ㉢     | A당    |

\* 모든 시기에 갑국 의회의 총 의석수(200석)는 변함이 없으며, 무소속 의원은 없음.  
\*\* 각 시기 내에서 정부 형태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의 변화는 없으며, 각 정당의 의회 의석수는 시기 내에서 동일함.

<보기>

- ㄱ. t+3시기에 갑국의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ㄴ. t+1시기 초에 정부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에 'A당'이 들어갈 수 없다.
- ㄷ. ㉠에 'B당'이 들어간다면, 갑국은 t+1시기와 t+2시기의 정부 형태는 다를 수 있다.
- ㄹ. ㉡에 'B당'이 들어간다면, ㉡에 '40'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2 (정치와 법)

## 사회탐구 영역

6. 기본권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B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는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와 관련이 깊고, B는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발전되었다. A와 B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며, 국민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 ① A는 자본주의의 폐단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탄생한 권리이다.
- ② B는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능동적 권리이다.
- ③ B와 달리 A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포괄적 권리이다.
- ④ A와 달리 B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권리이다.
- ⑤ A와 B는 모두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될 수 없는 본질적 권리이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공법(公法), 사법(私法), 사회법 중 하나임.)

사람들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기타 공공 단체의 일원인 국민이나 공민으로서 살아가는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A와 달리 B는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B에 따른 관계에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빈부 격차,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대립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가 사적 영역에 개입 및 규제하는 근거가 되는 C가 등장하게 되었다.

—<보 기>—

ㄱ. 민법과 헌법은 모두 B에 해당한다.  
 ㄴ. A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 B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C는 사인(私人)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A와 B의 중간 영역이라 할 수 있다.  
 ㄹ. A~C는 모두 사회 구성원에게 행위의 기준을 제공하고, 재판 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된 △△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결성된 A는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개발 계획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반면,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해 온 B는 해당 개발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개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C는 A와 B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지방 선거에서 친환경 도시 개발 전문가를 공천하였다.

- ① A는 정권 획득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 ② B는 국회에 의원을 배출하여 입법 활동에 참여한다.
- ③ C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부의 정책을 감시한다.
- ④ B, C와 달리 A는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 ⑤ A, B와 달리 C는 정치 과정 중 산출에 참여한다.

9.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최근 A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을 B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B는 A의 권한 행사를 견제 수단으로 헌법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으로서 C의 장(長)과 D의 장(長), 그리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E 등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지나, A의 방대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C와 D는 모두 우리나라 사법 영역의 정의를 실현하는 헌법 기관으로, C는 주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D는 주로 명령과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한다.

- ① E는 국무 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A는 B의 동의를 얻어야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③ D는 A가 발한 명령을 근거로 하여 판결을 내릴 수 없다.
- ④ D의 장(長)은 A의 동의 없이 C의 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다.
- ⑤ E가 헌법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C의 심판에 의해 파면될 수 있다.

1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은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가 본인 확인을 요구하자 '인터넷 게시판을 익명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 본인 확인제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직접 헌법 재판소에 (가) 을/를 청구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본인 확인제가 건전한 인터넷 문화 목적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지만,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본인 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과 기본권 제한이 가져오는 불이익 사이의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되지 않아 갑의 청구를 ㉡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보 기>—

ㄱ. 행정부가 제정한 명령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체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가)를 청구할 수 있다.  
 ㄴ. 헌법 재판소는 ㉠이 과잉 금지의 원칙 중 피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ㄷ. 헌법 재판소의 ㉡에 따라 기존 ㉠의 효력은 상실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1. 민법의 기본 원칙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과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제한 없이 누리도록 한다면, 경우에 따라 사회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현저하게 어긋나는 계약이 성립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민법은 계약의 내용이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무효로 하는데,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더라도 A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① 재산권의 행사는 공익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②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③ 범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④ 고의 또는 과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⑤ 직접적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이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을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A는 을의 상가에 위치한 갑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이 고용한 종업원 병(21세)의 실수로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 다치게 되었다. A는 갑에게 찾아가 항의하던 중 식당 내부의 천장 조명이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함께 이동하던 갑과 A는 B(15세)의 조작 과실로 B가 타고 있던 자전거와 부딪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한편, B의 법정 감독 의무자는 B의 부모인 C이다.

- ① 병이 A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갑은 병의 사용자로서 A에 대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② 갑이 A에 대해 공작물의 점유자로서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을은 A에 대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③ B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C는 A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 ④ B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C는 A에 대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과실로 인해 A에게 피해를 끼친 병과 B는 A에 대해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13.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다음은 서로 다른 범죄의 성립 요건 A~C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사례 (가), (나)에 대하여 옳은 법적 판단을 서술하시오.

- A, C와 달리 B는 행위자를 근거로 범죄를 판단하는 요소이다.
- 어떠한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A를 충족하는 경우 C는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사례>  
 (가) 갑(17세)은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을의 협박에 못 이겨 자신의 친구를 폭행하였다.  
 (나)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미약한 병(32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 정을 폭행하였다. 무는 정이 병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병을 밀쳐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 구분            | 학생의 답안 | 채점 결과 |
|---------------|--------|-------|
| (가)에 대한 법적 판단 | ㉠      | 틀린 답안 |
| (나)에 대한 법적 판단 | ㉡      | 옳은 답안 |

- ①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는 A가 없더라도 범죄로 성립할 수 있다.
- ② C의 조각 사유와 달리 B의 조각 사유는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③ ㉠에 '갑의 행위는 C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④ ㉡에 '병의 행위는 B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에 '무의 행위는 A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가 들어갈 수 있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17세)은 을(41세)에게 고가의 오토바이를 구매하였다. 아래 표는 갑, 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        |  |
|--------|--|
| <결과 1> | 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결과 2> | 갑과 을은 모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결과 3> |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책임을 촉구할 수 있다. |

<보 기>

- ㄱ. <결과 1>은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을이 오토바이의 브랜드를 속여 가격을 높게 제시한 경우 도출될 수 있다.
- ㄴ. <결과 2>는 갑이 을과의 계약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이후 갑의 법정 대리인이 해당 계약을 추인한 경우 도출될 수 있다.
- ㄷ. <결과 3>은 을이 계약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던 경우와 모르고 있던 경우 모두에서 도출될 수 있다.
- ㄹ. <결과 1>과 <결과 3>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 회사의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에 관한 단체 교섭을 요구하였다. A 회사는 노동조합의 해당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적법하게 파업을 이끌었다. 1개월 후, 노동조합장인 갑은 A 회사에서 해고되었는데 갑은 자신에 대한 해고 결정이 파업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갑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 노동 위원회는 재심 청구를 기각 하였다. 재심 판정 이후 갑은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보 기>

- ㄱ. A 회사가 적법하게 교섭을 거부하였더라도 A 회사의 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 ㄴ. A 회사의 노동조합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ㄷ. 갑은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ㄹ. 갑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A 회사를 피고로 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1심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한편, 을은 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1심 법원은 을이 재범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병은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1심 법원은 병이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점을 중대하게 보아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다.

- ① 갑은 실효 없이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 제기가 없던 것으로 간주되는 형을 선고받았다.
- ② 을은 수형 도중 가석방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 관찰을 부과 받아야 한다.
- ③ 병은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하여 구금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④ 갑과 달리 을에 대하여 검사는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을 것이다.
- ⑤ 을과 달리 병은 보석 제도를 활용하여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남)은 을(여)과 법률혼하였고, 그 사이에서 A와 B가 태어났다. 이후 갑은 을과 협의상 ㉠이혼하였고, A는 갑이, B는 을이 양육하게 되었다. 이후 을은 병과 ㉡법률혼하였고, 병은 을의 자녀 B(10세)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3년 후 병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을과 병은 재판상 ㉢이혼하였으며, B는 을이 양육하게 되었다. 그 후 병은 정과 혼인의 의사로 혼인 신고 없이 동거하였으며, 그 사이에서 자녀 C가 태어났고, 병은 C를 ㉣인지하였다.

- ① ㉠ 시점에서 B에 대한 친권은 을과 병이 공동으로 가진다.
- ② ㉡ 시점에서 유책 배우자인 병은 B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
- ③ ㉠과 달리 ㉡은 이혼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로 인해 C는 병과 정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다.
- ⑤ 갑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A와 B는 모두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18.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관계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므로 국가 간 갈등의 해소와 이해의 조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제기구를 통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고 국제적 협력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갑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 간 상충되는 이해의 조화가 가능하므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공동의 규칙을 수립하고 준수함으로써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을

- ① 갑의 관점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의 관점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군사력 증강을 통한 억지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 ③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국제 사회에 사회적 공동체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④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강제력 있는 중앙 정부에서 입법된 국제법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19. 국제법의 법원(法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문화된 형식으로 존재하는 A는 오늘날의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法源)이 되고 있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제 교류가 급증하고 그 대상 범위가 급속히 확장되고 있어, 관습이 국제 사회에서 법적 확신을 얻어야 하는 B의 형성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 ① 우리나라에서 A의 체결·비준 권한은 국회가 가진다.
- ② B의 예시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들 수 있다.
- ③ B와 달리 A는 우리나라에서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④ A와 달리 B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국제 사회에서 3개 이상의 국가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 4인과 비례 대표 의원 6인으로 구성되며, 유권자는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1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의원은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되며, 비례 대표 의석은 비례 대표 의원 정수(定數)에 정당 득표율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에 우선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1석씩 배분한다. 정당 득표율은 지역구 후보자에게 투표한 1표를 후보자 소속 정당에 1표를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하되, 무소속 후보자의 득표는 정당 득표율 산출 시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은 선거구별 각 유권자 집단이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과 지지 정당을 나타낸다. 단, 각 유권자는 자신의 지지에 따라서만 투표하며, 각 유권자 집단의 유권자 수는 동일하고 제시된 집단에 속하지 않은 유권자는 없다.

| 구분    | 집단 1 |    | 집단 2 |    | 집단 3 |    | 집단 4 |    |
|-------|------|----|------|----|------|----|------|----|
|       | 지역   | 비례 | 지역   | 비례 | 지역   | 비례 | 지역   | 비례 |
| 선거구 1 | A당   | A당 | A당   | B당 | B당   | C당 | 무소속  | A당 |
| 선거구 2 | B당   | A당 | B당   | B당 | B당   | C당 | C당   | A당 |
| 선거구 3 | A당   | A당 | B당   | A당 | B당   | B당 | 무소속  | C당 |
| 선거구 4 | B당   | A당 | B당   | C당 | C당   | C당 | 무소속  | B당 |

한편, 갑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거 제도 개편안이 제시되었다. 단, 개편안의 경우 위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한다.

각 유권자는 지역구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1표, 비례 대표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1표를 각각 행사한다. 현재의 총의석수를 기준으로 현행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할당한다. 각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에서 단순 다수제로 선출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수를 비례 대표 의석으로 배정한다.

\* 정당은 A~C당만 존재하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 개편안에서 모든 유권자는 지지하는 후보자의 소속 정당, 지지 정당에 따라 각각 지역구 선거, 비례 대표 선거에 투표함.

<보 기>

ㄱ. 현행에서는 지지 정당과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 소속 정당의 일치 여부에 의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ㄴ. 현행에 비해 개편안은 직접 선거 원칙의 실현 정도가 높다.  
ㄷ. 개편안과 달리 현행에서는 비례 대표 의석 중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존재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감독관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